

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4·3, 4·19, 5·18을 사례로 *

박홍서 (강원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제주 4·3사건, 4·19혁명, 그리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상이한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은 4·3 및 5·18 시기 한국의 국가폭력을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4·19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유도하였다. 본 논문은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해 이러한 차이를 냉전기 미소간 경쟁수준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은 4·3 및 5·18 시기 한국의 국가폭력에 대한 미국의 방조를 각각 미소 '냉전' 및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며, 4·19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행태를 1950년대 말 형성된 미소 '평화공존'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주제어: 국가폭력, 제주 4·3사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냉전, 구조적 현실주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8-B00027).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제주 4·3사건, 4·19혁명, 그리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하 각각 4·3, 4·19, 5·18)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동 사례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4·3 및 5·18시기 한국의 국가폭력을 지원 혹은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반대로 4·19시기에는 정치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유도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¹⁾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가 냉전기 미소간 세력경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한다.

월츠(Kenneth N. Waltz)는 국제정치학의 분석 단위를 국제체제(제 3이미지), 국가속성(제 2이미지), 그리고 개인(제 1이미지)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분석단위중 강대국간 세력배분(distribution of power)에 따라 형성되는 국제체제를 핵심적 설명변인으로 간주한다.²⁾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

1) 본 논문은 ‘국가폭력’을 갈통(Johan Galtung)이 정의내리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으로 이해한다. 구조적 폭력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이 아니라 국가와 같은 ‘비인격적’ 제도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조직화된 폭력이다.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 (1969), pp. 166~191. 냉전시기 한국 내에서는 국가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 장준하 의문사, YH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보이듯,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 일상적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사건과 같이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불특정 주민에 대한 구금 및 폭력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폭력의 규모(인명피해)가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4·3, 4·19, 5·18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국가폭력 사례에 대해서는 박기석, “국가폭력범죄와 피해자,” 『법학논총』, 제32권 2호 (2012), pp. 324~329 참조.

2)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의 맥락에서 미소 세력경쟁(제 3이미지)과 4·3, 4·19, 5·18 시기 미국의 상반된 대응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물론, 본 논문은 미소 세력경쟁이라는 구조변인만이 미국의 행태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논문은 미소 세력경쟁을 동 사례들에 대한 ‘허용적 원인(permissive cause)’으로 간주한다.

4·3, 4·19, 5·18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있어 미국 변인을 분석하려는 기존 연구는 다양하다.³⁾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각 사례들간 차이점 및 유사점을 밝히는 비교분석으로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구조적 현실주의에 기반해 동 사례들을 비교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대상 및 접근법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우선 2장에서 강대국-약소국간 비대칭 동맹 상황 아래서 약소국내 국가폭력상황에 대한 강대국의 대응을 동맹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기반으로 ① 4·3에 대한 미국의 대

Publishing Company, 1979), chapter 5;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3) 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 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 97~146;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정해구 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2006), pp. 245~342; 이완범, “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후반기 미국의 이승만 후계 체제 모색과 1960년 4월 이승만 퇴진,” 『세계정치 8』, 제28권 2호 (2007), pp. 127~170; 정일준, “4월혁명과 미국: 한국 정치변동과 미국의 개입양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선인, 2010), pp. 340~392; 이삼성,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 5·18 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pp. 559~640; 이수인·전원하, “광주 5월민중항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정책,” 5·18 기념재단 엮음,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pp. 531~558.

응을 미소 ‘냉전’의 출현이라는 맥락으로, ② 4·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 미소 ‘평화공존’이라는 맥락으로, 그리고 ③ 5·18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따른 미소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할 것이다.

II. 동맹 약소국의 국가폭력과 강대국의 대응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anarchy)’에 대한 전제로부터 출발해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독립변인으로 국가간 세력배분을 상정한다. 이에 따르면, 국제관계는 국내정치와 달리 폭력을 독점하고 관리하는 중앙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세력 격차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⁴⁾

물론, 구조적 현실주의가 개별 국가들의 행태를 구조변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월츠에 따르면, 그러한 구조 경도주의는 국가 속성으로 모든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원주의(reductionism)의 단순한 전복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들의 행태를 보다 세밀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치구조, 인식과 같은 단위 수준의 변인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4)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 88-89.

5)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72.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해 스웰러 등이 주장하는 ‘신고전 현실주의’는 구조수준의 변인과 단위수준의 변인을 포괄해 국제정치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Randall L. Schweller, “The Progressiveness of Neoclassical Realism,” in Colin Ela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MIT Press, 2003), p. 317.

이러한 맥락에서, 월츠는 국가간 세력배분을 국제정치 현상의 ‘허용적 원인(permissive cause)’이라고 간주한다. 즉, 국가간 세력배분은 특정한 국제정치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발생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개별 국가들은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는 타국가와의 세력격차라는 허용적 원인에 의해 제약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은행털이범이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의도는 은행의 보안수준이라는 현실에 제약받는다(6).

국가간 세력배분이 개별 국가의 행태를 제약하는 변인라면,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강대국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약소국은 그 세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국가간 세력배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관계와 같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는 약소국의 행태가 강대국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모로우(James D. Morrow)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대칭적 동맹관계 속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의 안보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율성이 약화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⁷⁾ 비대칭적 동맹간 ‘보호자게임(protector game)’도 이를 뒷받침한다. 약소국은 동맹관계의 붕괴로 초래될 비용이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동맹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⁸⁾

6) Waltz, *Man, the State, and War*, pp. 231~233.

7)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4 (1991), pp. 904~933.

8) Glenn H.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 47~48. 본 논문은 월츠의 정의에 따라 본 논문은 동맹 관계를 상호간 책무와 효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안보협력관계라고 규정한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강대국은 어떠한 상황에서 동맹 약소국의 행태를 제어하려 하는가?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간 세력배분이 국가들의 대외행태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면 동맹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행태 역시 경쟁하는 다른 강대국과의 세력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강대국간 경쟁수준이 강하다면, 강대국은 동맹 약소국이 자행하는 대내적 국가폭력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 강대국간 경쟁수준이 강할수록 동맹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약소국은 대내 정치상황에 대해 보다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대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큰 약소국이 ‘약자의 힘(power of the weak)’을 가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⁹⁾

냉전기 전반에 걸쳐 제 3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란 샤, 타이완 장제스, 필리핀 마르코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칠레 피노체트, 캄보디아 론놀 정권 등은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묵인하였다.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미소간 세력경쟁이 격화되는 1980년대 초 미국은 엘사바도르, 과테말라, 터키,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대규모 국가폭력 행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¹⁰⁾

물론, 약소국의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강대국의 묵인은 약소국이 동맹 관계에 충실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1963년 11월

University Press, 1987), p. 1.

- 9) 약자의 힘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72-473 참조.
- 10) 커스틴 셸라스 씀, 오승훈 옮김,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서울: 은행나무, 2003), pp. 237-274; 찰머스 존슨 씀, 이원태·김상우 옮김, 『블로우백』 (서울: 삼인, 2003), pp. 62-65; 조너선 닐 씀, 정병선 옮김,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서울: 책갈피, 2008), pp. 96-98.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정권의 전복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당시 불교도에 대한 지엠 정권의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비판하고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지엠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미군의 증원을 반대하고 아울러 북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지엠 정권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¹¹⁾

한편, 강대국간 경쟁수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동맹 약소국의 국가폭력 행위에 비판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977년 집권한 카터 정권이 ‘인권외교’를 천명하면서 제3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동서 대탕트리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1972년 상하이공동성명을 통한 미중 관계 개선, 미소간 전략무기 제한협정, 1973년 베트남전 종결, 그리고 1975년 헬싱키 유럽안보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미소 세력경쟁의 완화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해당 국가 내 온건 세력과의 연계 강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¹²⁾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미소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에 대한 소련의 정책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1956년 헝가리 사태 및 1968년 체코 사태 당시 브레즈네프 정권이 군사개입을 통해 시위대를 직접 진압했던 것과는 달리 1989년 소련은 동독의 호네커 및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감행하려고 했던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¹³⁾

11)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2007), p. 133; 조너선 닐,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pp. 87~88.

12) 커스틴 셀라스, 『인권, 그 위선의 역사』, p. 228.

13) Gaddis, *The Cold War*, pp. 243~248.

물론, 강대국간 세력경쟁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계적으로 강대국으로 하여금 동맹 약소국의 국가폭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약소국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및 동맹 충성도에 따라 강대국의 대응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터 정권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타이완 등과 같이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들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캄보디아, 파라과이, 우간다 등의 국가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¹⁴⁾ 더욱이 냉전 붕괴 이후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학살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이라든지, 중국이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 등도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¹⁵⁾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이념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강대국간 세력경쟁의 수준과 동맹관계에 대한 약소국의 충성도(level of commitment)를 양 축으로 하는 조합에 따라 동맹 약소국의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강대국의 대응을 유형화할 수 있다.¹⁶⁾ III장에서는 이에 기초해 4·3, 4·19, 5·18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세분화한다.

14) 커스틴 셀라스, 『인권, 그 위선의 역사』, p. 234.

15) James Dunn, “Genocide in East Timor”, in Samuel Totten and William S. Parsons, eds, *Century of Genocide* (New York: Routledge, 2009), p. 266, 275/ 284~285; BBC, “Chinese leader boosts Sudan ties,” February 2, 2007. <<http://news.bbc.co.uk/2/hi/6323017.stm>>

16) 본 논문은 약소국의 동맹 충성도를 ① 강대국을 분쟁에 연루(entrapment)시키지 않으려는 행태, 아울러 ② 강대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이탈(방기: abandonment)하지 않으려는 행태의 강약으로 규정한다. 동맹인 국가들은 상대방로 인한 분쟁에 연루될 위험과 반대로 상대방에게 방기당할 위험을 동시에 회피하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pp. 461~495 참조.

〈표 1〉 동맹약소국 국가폭력에 대한 강대국의 대응

강대국간 경쟁수준	강	비판을 통한 적극적 통제 (베트남 지엠 정권)	방조 및 지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기, 타이완, 칠레, 인도네시아)
	약	비지지, 제재 (데탕트: 카터 인권외교, 고르바초프 동유럽 외교)	소극적 대응, 외교적 해결 (동티모르, 다르푸르)

약

강

약소국의 동맹 충성도

Ⅲ.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1. 미소 '냉전'의 출현과 4·3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는 무장대가 경찰서와 우익 단체를 급습함으로써 4·3이 발발하였다. 이후 무장대에 대한 진압은 1954년 9월까지 지속되면서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4·3 희생자는 기록에 따라 최소 15,000명에서 65,000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특히, 1953년 제주도 당국이 사망자수를 27,719명이라고 공식 발표한 사실, 아울러 희생자가 집중된 1948년과 1949년의 인구조사 통계 차이가 26,411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략 인명피해는 3만여 명 내외라고 추산할 수 있다.¹⁷⁾

4·3이 미군정기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8월 15일 남한정권 수립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군 간부가 4·3 진압부대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등은 4·3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사한다.¹⁸⁾ 주한미군 사령부의 4월 29일 제주도 작전 보고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John R. Hodge)는 ① 제주도 지역의 무질서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하며, ② 게릴라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대와 경찰 사이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③ 남한 인민들이 제주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진압 작전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⁹⁾

특히, 미군정은 5월 1일 신원미상의 무장세력에 의한 오라리 습격사건이 발생한 직후 무장대에 대한 대대적 토벌작전을 지시하였다. 4월 28일 무장대 대장 김달삼과 전투중지 및 무장해제에 합의했던 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은 오라리 사건이 양측간 합의를 방해하려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군정은 이를 일축하였다. 사실, 미군정은 무장대와의 타협 가능성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정이 ① 김익렬-김달삼간 회담 이전인 4월 27일에 이미 강경진압을 결정했다는 사실, ② 군정장관 딘(William Frishe Dean)이 4월 28일 제주도를 비밀 방문해 회담 결렬을 지시한 사실, 그리고 ③ 기습공격이라던 오라리 사건을 세밀히 촬영해 이후 선전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미군정의 무장대 진압의지를 보여준다.²⁰⁾

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선인, 2003), pp. 364~367.

18) 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pp. 129~130.

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이하 제주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7』-미국자료편 ①, “주한미육군사령부 공한: 제주도에서의 활동보고(1948.4.29),” (서울: 금성문화사, 2003), pp. 237~238.

20) 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pp. 131~132;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4·3을 소련과의 세력경쟁이 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발생한 공산주의 폭동으로 인식하였다. 미군정이 4·3을 인민위원회 및 남로당 세력에 의한 공산 폭동으로 인식하고 소련 및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우려하였다는 사실은 제주도 상황 보고서에 명확히 드러난다.²¹⁾ 미군정은 제주도 해역에서 소련의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 및 잠수함 목격에 관한 한국 국방경비대의 보고서, 제주도가 “작은 모스크바”임을 주장하던 제주도 서북청년단의 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이다.²²⁾

사실, 미소냉전은 일종의 ‘협조체제(concert system)’ 속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월츠에 따르면, 국가들이 힘을 무한대로 추구할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한다.²³⁾ 따라서, 각자의 세력권이 보장된다면,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나폴레옹 전쟁 후 1815년 비엔나 회담을 통해 구축된 유럽협조체제나, 1차 세계대전 후 1921년 워싱턴 회담을 통해 구축된 미일 협조체제는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²⁴⁾

와 성격,” pp. 284-287.

- 21)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 제주도 인민위원회 조직(1948.6.10.-11),” p. 74;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제주도 선거반대 폭동 발생(1948.4.9.),” pp. 168-169.
- 22)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 제주도는 ‘작은 모스크바’/ 안철(1947,11,25),” pp. 48-49;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 계엄령 지속 요청(1949,1,5),” p. 104;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 연대 교체기간 괴선박 출현(1949,1,7.),” p. 106;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정체불명 잠수함 제주해상에서 발견(1948.10.15.),” p. 194.
- 23)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126.
- 24)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서울: 한길사, 2009), pp. 451-508.

이러한 맥락에서 1945년 2월 수립된 얄타체제(Yalta system) 역시 미소 양국이 각각의 세력권을 인정함으로써 상호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협조체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미소 냉전이 시작되는 상징적 사건들인 1946년 2월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의 대소련 봉쇄정책에 관한 전문, 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 같은 해 6월 마셜플랜은 미국이 소련과의 협조체제 속에서 자국의 세력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47년 9월 코민포름의 창설,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의 수립, 같은 해 6월 베를린 봉쇄 역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 소련의 세력권 강화 조치라 할 수 있다.²⁶⁾

물론, 미소 협조체제가 양국 간 전면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장의 카르텔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일방적 가격인하와 같은 ‘배반’ 가능성을 경계하듯이, 미소 양국 역시 협조체제 속에서도 상대방의 과도한 세력확대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탁통치의 준비 단계로서 1946년 3월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듬해 10월 결국 결렬된 배경에는 협조 속 경쟁이라는 미소 협조체제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미국이 소련에 한반도 38선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제안한 배경에는 ‘연합국 정신’에 기초한 협조의지가 투영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및 남한지역만의 단정수립 시도는 한반도내에서 안정적인 세력권을 확보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상반된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⁷⁾

25) 윌러스틴은 미소 얄타체제를 보다 ‘담합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즉, 얄타체제를 통해 미국이 세계의 2/3를, 소련이 나머지를 통제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얄타체제하 미소간 군사적 갈등(한국전쟁, 쿠바미사일 위기) 등은 곧 현상 복원되었으며, 헝가리 사태 등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수사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Immanuel Wallerstein, “The world system after 1945,” Eurozine (2011) <<http://www.eurozine.com/articles/2011-04-29-wallerstein-en.html>>.

26) Gaddis, *The Cold War*, pp. 27~34.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의 핵심 원인은 반탁세력의 임시정부 참여를 둘러싼 미소간 대립이었다. 반탁세력의 임시정부 참여를 주장하는 미국과 그것을 반대하는 소련은 결국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미국이 신탁통치안의 최초 제안자였다는 측면에서 반탁세력을 임시정부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행태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반탁세력을 제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할 경우 향후 그것이 친소적 성격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소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²⁸⁾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남한지역의 세력권화가 소련의 세력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소련은 전통적인 민족해방운동 노선에 따라 수행된 “현지화·한인화” 전략을 통해 북한 지역에 대한 세력권 강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소련은 일제시기 북한내의 항일 및 좌익세력들을 후원함으로써 북한지역의 “혁명적 정세”를 자국의 세력강화에 최대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²⁹⁾ 이에 비해 남한지역에서 미군정과 자생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협조적이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해방직후 수립된 인민공화국(인공)을 소련과 연계된 좌익세력이라고 간주하고 1945년 12월 12일 인공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1946년 2월에는 인공의 산하단체인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를 경찰이 급습하고, 9월 초 위조지폐 사건의 연루혐의로 조선공산당 박헌영 등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림으로써 미군정은 좌익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개시하였다.³⁰⁾ 특히, 1946년 전반에 걸쳐 진행된 좌익세력에

27)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서울: 선인, 2009), pp. 70-99.

28) 김계동,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 148-150.

29)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11), p. 219.

30)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193-201/246-252.

대한 미군정의 공세는 상술한 1946년 2월 조지케넌의 ‘전문’과 같은달 스탈린의 ‘냉전연설’ 등으로 심화되기 시작한 미소 경쟁 구도속에서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남한 내 대표적 우익세력인 이승만을 지원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게는 미소 세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박헌영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 세력과의 협력은 애초 배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좌익과의 연계가능성이 우려되는 중도적 여운형 세력 역시 신뢰할만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없었다. 반면, 임시정부 세력은 그들의 친미적 성향으로 인해 보다 적합한 협력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김규식과 김구에 비해 소련 및 인공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명확히 표명하던 이승만의 전략적 가치가 클 수밖에 없었다.³²⁾

물론, 미국은 이승만의 극우 정치적 “완고함, 오만함, 집요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이 신탁통치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주도한 좌우합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대하려 하자 미국은 그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³³⁾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을 내세우는 이승만은 소련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유용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승만의 과도한 비타협적 행태는 반대로 미소 협조체제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이승만의 강경한 반공노선으로 인한 소련과의 갈등 심화 역시 차단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이외에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단정 노선은 남한지역에서 미국의 세력권 유지라는 의도에

31)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p. 226-227.

32)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 193.

33) 도널드 스티븐 맥도널드,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율김,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 (서울: 한울, 2001), pp. 242-243.

부합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초로 표명하였으며, 12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단정수립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무산 이후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미국이 연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던 것이다.³⁴⁾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 이후 미군정은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이승만을 “모든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유일한 한국인 인사였고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며,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꾸준한 반대 입장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가능한 어떤 다른 행동 노선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던 것이다.³⁵⁾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만 정권 수립 직후부터 전개된 4·3에 대한 강력한 진압작전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부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4·3 이후 8월까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머물던 토벌작전이 8월 정권 수립을 기점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4·3 진압책임을 신생 한국정권에 전가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사고와도 맞물려 있었다.³⁶⁾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창설하고 제주해안을 봉쇄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진압부대 및 서북청년단에 의한 ‘초토화’ 작전을 독려함으로써 제주도 주민의 사상자는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34)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울: 창비, 2007), pp. 64-65.

35) 제주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 “주한미육군사령부 공한: 정치상황 요약 (1948.5.23.)”, pp. 241~242.

36) 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pp. 137~139.

2. 미소 ‘평화공존’과 4·19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 진압과 사상자 발생은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15선거 직후 마산 등지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항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월 26일 이승만의 대통령 사임까지 총 186명이 사망하고 6,259명이 부상당하였다.³⁷⁾

4·19가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폭력진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고 이승만의 대통령직 사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주한 미대사 매카나기(Walter Patrick McConaughy)는 4월 19일과 21일 이승만과의 접견을 통해 현 상황은 3·15부정선거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인식을 전달하고, 아울러 계엄령 해제 및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국무부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될 경우 초래될 상황을 검토하고 정권 교체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4월 25일 교수단의 시위로 반정부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4월 26일 오전 매카나기는 다시 이승만과 접견하고 ‘무조건’ 사퇴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애초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하던 이승만이 매카나기와의 회동 이후 사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미국의 압력이 이승만 퇴진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³⁸⁾

사실,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은 4·19 당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부터 이승만 정권

37) 4·19 당시 사망자수는 시각에 따라 115명에서 약 200명까지로 추산된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한국의 민주봉기』 (서울: 오월의 봄, 2015), p. 230/ 666.

38) 이완범, “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후반기 미국의 이승만 후계 체제 모색과 1960년 4월 이승만 퇴진,” 『세계정치 8』, 제28권 2호 (2007), pp. 225~226; 정일준, “4월혁명과 미국: 한국 정치변동과 미국의 개입양식,” 한국 민주주의연구소 편,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선인, 2010), pp. 372~385.

퇴진을 기획하였기 때문이다. 5월 25일 이승만 정권이 부산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자, 미국은 반이승만 군사 쿠데타 작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제거계획은 1953년 5월 '상비(Ever-Ready)' 계획으로 재추진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한국군 단독의 북진 의도를 드러내자 미국은 이승만 체제를 유엔군이 주도하는 군정체제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휴전에 대한 이승만의 비타협적 행태는 한국전쟁의 조기종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이젠하워 정권의 이해관계와 부합할 수 없었던 것이다.³⁹⁾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자유당 및 민주당 온건파를 '육성'해 이승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만의 미국인 고문이었던 올리버(Robert Oliver)의 증언과 같이, 4·19 시기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사퇴 압력은 상비 계획이 결국 실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⁴¹⁾ 그렇다면, 미국은 왜 1960년에 이르러서야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현실화하였는가? 이승만은 1945년 미군정 시기부터 미국이 의도하던 신탁통치 및 좌우합작에 반대하고 정권 수립 이후에도 휴전, 한일관계 개선, 한국군 감축, 환율 절하,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에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왔다.⁴²⁾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해 미국의 지원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이 한

39) 로버트 올리버, 박건영 옮김, 『대한민국 건국의 내막』 (서울: 계명사, 1998), pp. 661~678;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pp. 127~129.

40) 이완범, "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pp. 214~222.

41) 로버트 올리버, 『대한민국 건국의 내막』, p. 777; 정일준, "4월혁명과 미국: 한국 정치변동과 미국의 개입양식," p. 341.

42) 박태균,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권 시기,"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한미관계 60년』 (서울: 역사비평, 2010), pp. 24~38.

국에 대한 원조를 하지 않을 경우 ‘반공보루’로서의 한국이 붕괴될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였던 것이다.⁴³⁾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비타협적 행태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19 이전 이승만 제거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확고한 반공노선을 견지하는 이승만 정권의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의 전복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⁴⁴⁾ 사실, 4·19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당 및 민주당 등의 의회 정당 세력은 이승만의 ‘초당적’ 통치력을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승만의 반공노선 또한 약화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오히려 1957년 진보당 해산 및 조봉암 체포, 1958년 보안법 개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3·15선거 이후의 정치소요 상황 역시 공산주의 세력의 음모라고 간주하면서 강경한 대응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⁴⁵⁾

따라서, 4·19 당시 미국의 이승만 퇴진 요구는 이전의 정치적 파동과 달리 대규모 희생자와 정국 혼란의 극대화라는 상황변수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폭력 사태를 방지하거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속할 경우, 그 반작용으로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돼 자칫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좌익 정치세력의 확장가능성을 우려하였던 것이다.⁴⁶⁾ 그러나, 한국의 국가폭력 사태라는 상황변수들만으로도 4·19 당시 미국의 행태를 적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한

43) Gaddis, *The Cold War*, pp. 129~130.

44) 도널드 스텐 맥도날드,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 p. 308.

45) 도널드 스텐 맥도날드,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 pp. 299~305/ 315; 50주년 4·19혁명 기념사업회, 『4·19 혁명사』 상 (서울: 리윤커뮤니케이션, 2011), pp. 577~580.

46) 정일준, “4월혁명과 미국: 한국 정치변동과 미국의 개입양식,” pp. 352~353.

계가 있다. 상술한 4·3 시기 이승만 정권에 의해 더 심각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대응 변화는 한국의 정치상황이라는 행위변인보다는 동서냉전의 완화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기 미소간 세력경쟁 양상은 4·3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집권한 흐루시초프는 대내적으로 스탈린의 우상숭배적 독재 행태를 비판하고, 대외적으로 스탈린의 ‘전쟁불가피론’을 비판하면서 서방과의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노선을 추구하였다. 흐루시초프는 사회주의 세력의 급속한 성장 및 자본주의 세력들간의 분열로 인해 호전적 자본주의 세력은 제어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동서간 평화와 군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⁴⁷⁾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정치적 수사라기보다는 인류 멸절을 초래할 것이 확실한 수소폭탄 시대에 있어 미소간 전쟁을 방지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 양국은 1952년 11월과 1953년 8월 각각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상호간 전쟁방지를 최고 목표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⁸⁾ 흐루시초프 정권뿐만 아니라 아이젠하워 정권 역시 집권초기부터 대결지향적인 대소련 인식에서 벗어나 소련을 ‘협력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⁴⁹⁾

실제로 미소 관계는 1959년 9월 25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급속히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흐루시초

47) Paul Marantz, "Prelude to Detente: Doctrinal Change under Khrushchev,"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9, no. 4 (1975), pp. 501-528.

48) Gaddis, *The Cold War*, pp. 62-72.

49) 로버트 올리버, 『대한민국 건국의 내막』, p. 664.

프 등장 이후 중소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미소관계 개선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소일변도’ 정책을 통해 소련에 의존하였던 중국으로서는 미소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용인할 수 없었다.⁵⁰⁾ 따라서 중국은 1958년 타이완 금문도 포격과 같은 벼랑 끝 전술로 소련에게 동맹국 의무를 강박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핵기술 이전을 위해 중국에 파견되었던 과학자들을 대거 철수시키는 등 중국의 호전적 행태로 인한 미소관계의 경색을 차단하려 하였다.⁵¹⁾

평화공존 개념에 기반한 미소관계의 개선은 알타회담에서 정초된 미소 협조체제의 복원을 의미하였다. 즉, 미국과 소련은 양국간 세력권에 대한 존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국제질서 유지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미소 양국은 상대방의 세력팽창에 대한 우려 없이 각자의 세력권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4·19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비판 행태도 미소간 평화공존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소련(북한)의 공세에 대한 우려 없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이승만 정권의 전복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3·15선거 이후 소요사태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과 야당 세력이 있다는 논리를 통해 미국의 사퇴 압력을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미소간 세력경쟁을 이용해 미국의 양보를 확보하려는 기존의 전술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축하고 4·19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정치 경제적 실정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⁵²⁾ 4·3 시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행태는

50)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pp. 493~494.

51) 박홍서, “냉전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딜레마와 군사 행태,” 『현대중국연구』, 제 15권 1호 (2013), pp. 15~19.

52) 도널드 스텐 맥도날드,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 pp. 314~319.

한국의 질서회복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그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소간 세력경쟁이 완화된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을 보다 안정적인 대소 반공기지로 유지·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의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월 21일 이승만과의 접견에서 매카나기는 혼란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산주의 세력이 이를 이용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는데,⁵³⁾ 이것은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 보다 부합하는 한국정권의 형상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1년 5월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공산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국이 박정희를 4·19 이후 한국의 혼란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간주한 사실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⁵⁴⁾

3. 미소 ‘신냉전’의 출현과 5·18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 세력의 무차별적 진압은 4·3 및 4·19와 비견될 수 있는 국가폭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154명이 사망하고, 1628명이 부상당하였으며, 70명이 실종되었다.⁵⁵⁾

5·18 당시 미국은 4·19에 대한 대응과는 상반되게 신군부 세력과 긴밀히 협의하는 행태를 보였다. 5월 7일 신군부 세력은 주한 미대사 글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 Jr.)에게 시위진압을 위해 특전 여단을 이동

53) 정일준, “4월혁명과 미국: 한국 정치변동과 미국의 개입양식,” p. 376.

54) 미국의 박정희 ‘승인’ 과정은 도널드 스텐 맥도날드,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 pp. 325~333 참조.

55)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https://518.org/ease/menu.es?mid=a10304010000).

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통보했으며, 5월 8일 글라이스틴은 전두환과의 회동에서 그러한 군대 동원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⁵⁶⁾ 특히, 미국 현지 시각 5월 22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정책검토 위원회는 5·18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① 광주지역의 질서회복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한국 당국이 필요할 경우 군대를 동원한 진압이 가능하며, ② 미 인사의 방문취소와 같이 한국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③ 시위 진압이 성공적일 경우 이후 한국 당국에 정치민주화를 요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국가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이러한 입장을 “단기적으로 (진압)지지, 장기적으로 정치 자유화에 대한 압력”이라고 요약하기도 하였다.⁵⁷⁾

아울러, 같은 날 글라이스틴과 주한미사령관 위킴(John Adams Wickham, Jr.)은 한국군 20사단의 광주지역으로의 이동을 승인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신군부세력과의 협의를 통해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를 한반도 전역에 배치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상황 속에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 하였다. 또한 미국은 5·18 유혈사태의 원인이 반정부 과격파들에게 있다는 한국 당국의 입장에 동의하기도 하였다.⁵⁸⁾ 글라이스틴이 시위대 지도부가 요청한 당국과의 대화중재를 거부한 사실 역시 5·18 진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다.⁵⁹⁾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4·19 당

56) Tim Shorrock, “The Cherokee Files: New Documents Reveal U.S. Policy Making During Kwangju.” (1996) (http://timshorrock.com/?page_id=334)

57) Cherokee files, White House NSC meeting on Kwangju May 22, 1980. (<http://timshorrock.com/wp-content/uploads/CHEROKEE-FILES-White-House-NSC-meeting-on-Kwangju-May-22-1980.pdf>)

58) 이삼성,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pp. 631~633.

59)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

시 이승만 정권에게 시민대표들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재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행태였다.⁶⁰⁾

물론, 카터 정권이 전두환 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① 12·12 쿠데타 과정에서 발생한 신군부 세력의 자의적 군대이동을 비판하고 한미연례안보회의를 연기했던 사실, ② 8월 27일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직후 새로운 헌법에 의한 조기선거를 요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③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구명에 노력했다는 사실 등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드러낸다.⁶¹⁾ 그럼에도 미국은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 세력이 더 이상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을 묵인하는 행태를 보였다. 미국은 신군부세력에 대한 비판이 자칫 카터의 철군정책 이후 경색된 한미간 군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⁶²⁾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제 3세계 독재권력에 대한 미국의 보편적 전략이기도 하였다. 즉, 미국은 5·18과 같이 극심한 혼란상황에서는 신군부 세력에 동조해 한국의 질서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들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독재권력에 협조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중화시키려 한 것이다.⁶³⁾ 취임 초부터 ‘인권외교’를 강력하게 주창해 온 카터 정권조차 5·18과 같은 국가폭력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

항쟁과 정치·역사·사회』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p. 45; Shorrock, “The Cherokee Files.”

60) 4·19 당시 미국의 중재노력은 도널드 스텐 맥도날드,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 pp. 318-319 참조.

61) 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4), pp. 98/105-106.

62) Shorrock, “The Cherokee Files.”

63) 이삼성,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형통로와 미국의 위치,” pp. 636-637.

3세계 외교정책에 내재된 규범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권외교를 표방한 카터 정권이 5·18 진압에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은 그 배경에 정권의 속성을 벗어나는 구조적 원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9년 데탕트의 붕괴 및 그로인한 ‘신냉전’ 구도의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은 1972년 미소간 전략무기제한협정, 미중간 상하이공동성명, 1973년 베트남전 종전을 위한 파리평화회담, 그리고 1975년 헬싱키 유럽 안전보장 협력회의로 이어진 동서 데탕트의 종결이라 할 수 있다. 데탕트는 1950년대 후반 미소간 ‘평화공존’과 유사하게 알타체제의 원칙 준수 및 각각의 세력권에 대한 불간섭을 재확인하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⁶⁴⁾ 그러나 미소 데탕트 역시 상호간 ‘배반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강대국간 협조체제의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신냉전은 바로 이러한 데탕트의 취약성으로부터 유발되었던 것이다.

데탕트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제 3세계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미소 양국이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발발한 이집트-이스라엘 전쟁과 그 중재과정에서 이집트가 우방인 소련을 배제하고 미국에 의존하면서 상호 세력권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데탕트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75년 앙골라 내전 및 1977년 에티오피아 내전의 소련개입, 1979년 1월 미국이 지원하는 이란의 샤 정권 전복, 7월 니카라과 소모사정권 전복, 그리고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데탕트는 결국 붕괴하였던 것이다. 카터는 1980년 1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2차 대전 이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소련의 세력팽창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

⁶⁴⁾ Gaddis, *The Cold War*, p. 187/198.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스크바 올림픽을 불참하고 소련과의 제 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철회하였다.⁶⁵⁾

5·18 진압에 대한 미국의 방조는 이러한 신냉전과 맞물려 발생하였다. 사실, 카터는 취임 직후부터 한국의 인권문제와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 한국에 대한 정책이 이전 정권과 달리 비판적일 것임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카터는 “모든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한미군 철군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데탕트 분위기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⁶⁶⁾

그러나 이후 카터 정권의 주한미군 철군계획은 신냉전의 출현과 함께 철회되었다. 카터는 1979년 6월 29일 방한해 박정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철군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안정, 그리고 이들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책변화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 내 인권상황이 이전 보다 ‘개선’되었다는 논리로 정당화하기도 하였다.⁶⁷⁾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이후 5·18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10·26 이후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격화돼 이란 혁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12월 3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홀부르크(Richard Holbrooke)는 주한 미대사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이 “또 다른 이란(another Iran)”이

65) Gaddis, *The Cold War*, pp. 203~214; Jimmy Carter,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3, 1980. (<http://millercenter.org/president/carter/speeches/speech-3404>)

66) 카터의 발언은 Oberdorfer, *The Two Koreas*, p. 70 참조.

67) 이삼성,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형통로와 미국의 위치,” pp. 590~605; 김동택, “5·18의 국제적 배경,”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pp. 667~670.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반정부 세력의 비타협적 행태로 인한 정국의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글라이스틴은 반정부 세력에게 보다 온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기도 하였다.⁶⁸⁾

5·18 직후에도 미국은 시위 진압의 불가피성을 냉전구도 속에서 정당화하였다. 광주진압 직후 CNN과의 기자회견에서 카터는 “공산주의의 침략과 전복으로부터 한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는 일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일에 선행한다”고 발언하고, 아울러 “우리의 맹방과 무역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소련의 영향력에 내줄 수는 없다”고 발언하였던 것이다.⁶⁹⁾ 뿐만 아니라, 주한미사령관 위컴 역시 8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안보와 내부안정은 정치민주화에 선행한다고 발언하였다.⁷⁰⁾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1년 2월 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대한국정책의 핵심적 목표가 안정적인 세력권 관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12·12쿠데타 및 5·18 진압을 통해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상회담을 필요로 했다면, 신보수주의 세력에 기반한 레이건 정권으로서는 소련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할 합리적 동인을 가졌던 것이다. 동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미 지상군 철수계획 폐

68) NODIS: “Nobody wants another Iran,” December 3, 1979.

(<http://timshorrock.com/wp-content/uploads/NODIS-Holbrooke-Nobody-wants-another-Iran-Dec.-3-1979.pdf>)

69) 이수인·전원하 “광주 5월민중항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정책,”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p. 546.

70) Oberdorfer, *The Two Koreas*, pp. 104~105.

기를 확약하고 12·12 이후 중단된 한미연례안보회의를 재개할 것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으로 기여할 한미양국의 침략억제 및 방어상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수 및 기술지원에 합의하였던 것이다.⁷¹⁾

IV. 결론

4·3, 4·19, 그리고 5·18 시기 미국은 모두 한국의 조속한 질서회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의 질서회복 세력에 대한 대응 방식은 상이하였다. 미국은 4·3과 5·18 시기 한국 당국의 진압을 승인하거나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4·19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국의 국가폭력 행위를 비판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미소 세력경쟁이라는 구조수준의 변인과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행태라는 단위수준의 변인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앞에서 제시된 <표 1>을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71) 『서울신문』, “주한미군 철수계획 철회-한미 역사적 정상회담, 14개항 공동성명,” 1981.2.3.

〈표 2〉 한국의 국가폭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미소세력 경쟁	강	냉전 심화: 4.3 진압	신냉전: 철군계획 취소(1979), 5.18 무력진압 동의 및 신군부 지지)
	약	평화공존: 이승만 사임 요구 (4.19) 테탕트: 카터 인권외교	냉전의 해체: 1987?

약

강

한국의 동맹 충성도

〈표 2〉의 조합 역시 각 변인의 값이 상대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념형에 불과하다. 미소간 평화공존이나 테탕트가 양국간 세력경쟁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은 아니며, 한국의 동맹 충성도 역시 각각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평화공존 시기보다는 테탕트 시기가 미소간 경쟁의 수준이 보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4·3 시기 이승만 정권은 4·19 시기와 비교해 한미관계에 보다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미소관계는 ‘협조 속 경쟁’이라는 강대국간 협조체제의 양면적 특성을 보여준다. 미소 알타체제는 상호간 무력충돌의 방지 및 세력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협조적 측면과 동시에 이러한 묵계를 넘어서는 상대방의 세력팽창을 경계하는 갈등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였다. 동맹 약소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 역시 이러한 미소관계의 양면적 측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4·3과 5·18 시기 한국의 국가폭력 상황을 방조했던 행태는 각각 냉전의 출현과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미소 세력경쟁의 심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 4·19 시기 미

국의 비판적 개입은 스탈린 사후 평화공존론에 기초한 미소관계의 해빙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상관관계가 있다.

소련과의 세력경쟁 수준이 동 사례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결정하는 ‘허용적’ 원인이라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충성도는 동 사례들을 설명하는 행위수준의 변인들이라 할 수 있다. 5·18시기 및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은 이승만 정권 및 박정희 정권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맹 약소국으로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1970년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핵개발 계획을 전두환 정권이 취임 직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는 사실과 미국 금융자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⁷²⁾

한편, 본 논문이 사례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1987년 6월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20일 계엄령 발동을 통한 시위대 진압을 계획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미 대사 릴리(James Lilley)는 19일 전두환과의 면담을 통해 계엄령 선포는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고 광주에 재앙적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경진압을 반대하였다.⁷³⁾ 아울러 6월 23일 미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 시거(Gaston J. Sigur)가 방한해 전두환을 면담하고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였다.⁷⁴⁾

72) 전두환 정권의 핵개발 취소 및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각각 Scott Snyder, “South Korean Nuclear Decision Making,” in William C. Potter and Gaukhar Mukhatzhanova, eds, *Forecas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21st Century: A Comparative Perspective*, vol. 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62; 조지 카치아피카스, 『한국의 민중봉기』, pp. 367~377 참조.

73) 한국경제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 편, 최경은 옮김, 『대사관 순간의 기록: 한미 외교 현장의 비사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0), pp. 37~39.

74) 고승우, “미국과 한국군의 특수관계,” 『한겨레신문』. 1989.3.22.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5·18 시기 무력진압에 동조했던 것과는 상반되며 4·19 당시 미국의 행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이론적 맥락에 따르면, 1987년 6월 미국의 행태는 미소관계의 증진이라는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가 ‘신사고(New Thinking)’ 정책에 기반해 미국에 대해 전례없이 유화적 태도를 표방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대소련 견제라는 구조적 제약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발전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사례 연구는 향후 동 주제에 관한 이론화를 모색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르비치(Peter Gourevitch)는 ‘전도된 제 2이미지(second image reversed)’ 개념을 통해 국가간 세력관계가 한 국가의 속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적하였다.⁷⁵⁾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강대국간 세력관계와 약소국내 국가폭력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전도된 제 2이미지 개념을 보다 정교화 시키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16년 4월 14일 / 심사: 2016년 4월 20일 / 게재확정: 2016년 5월 17일

⁷⁵⁾ Gourevitch, Peter,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 (1978), pp. 881~912.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김계동.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도널드 스티븐 맥도널드.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옮김.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 서울: 한울, 2001.
- 로버트 올리버. 박건영 옮김. 『대한민국 건국의 내막』. 서울: 계명사, 1998.
-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울: 창비, 2007.
-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한미관계 60년』. 서울: 역사비평, 2010.
- 50주년 4·19혁명 기념사업회 편. 『4·19 혁명사』 상. 서울: 리온커뮤니케이션, 2011.
-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광주: 5·18기념재단, 2010.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서울: 한길사, 2009.
-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서울: 선인, 2009.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선인, 2003.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자료집 7』 -미국자료편 ①. 서울: 금성문화사, 2003.
-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11.
- 정해구 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2006.
- 조너선 닐. 정병선 옮김.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서울: 책갈피, 2008.
- 조지 카치아피카스. 『한국의 민중봉기』. 서울: 오월의 봄, 2015.
- 찰머스 존슨. 이원태·김상우 옮김. 『블로우백』. 서울: 삼인, 2003.
- 커스틴 셀라스. 오승훈 옮김.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서울: 은행나무, 2003.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4월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선인, 2010.
- 한미경제연구소 편. 최경은 옮김. 『대사관 순간의 기록: 한미외교 현장의 비사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0.

국문 논문

- 박기석. “국가폭력 범죄와 피해자.” 『법학논총』, 제32권 2호, 2012.
- 박홍서. “냉전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딜레마와 군사 행태.” 『현대중국연구』, 제15

권 1호, 2013.

이완범. "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후반기 미국의 이승만 후계 체제 모색과 1960년 4월 이승만 퇴진." 『세계정치 8』, 제28권 2호, 2007.

영문 단행본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MIT Press, 2003.

Co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Gaddis, John Lew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2007.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Oberdorfer, Don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4.

Samuel Totten and William S. Parsons, eds. *Century of Genocide*. New York: Routledge, 2009.

Snyder, Glenn H.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William C. Potter and Gaukhar Mukhatzhanova, eds. *Forecas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21st Century: A Comparative Perspective*, vol. 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영문 논문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 1969.

- Gourevitch, Peter.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 1978.
- Marantz, Paul. 1975. "Prelude to Detente: Doctrinal Change under Khrushchev."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9, no. 4, 1975.
-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신문

- 고승우. "미국과 한국군의 특수관계." 『한겨레신문』. 1989.3.22.
 "주한미군 철수계획 철회-한미 역사적 정상회담, 14개항 공동성명." 『서울신문』. 1981.2.3.

인터넷 자료

-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https://518.org/ease/menu.es?mid=a10304010000>〉
- BBC. "Chinese leader boosts Sudan ties," February 2, 2007.
 〈<http://news.bbc.co.uk/2/hi/6323017.stm>〉
- Carter, Jimmy.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3, 1980.
 〈<http://millercenter.org/president/carter/speeches/speech-3404>〉
- Cherokee files. White House NSC meeting on Kwangju, May 22, 1980.
 〈<http://timshorrock.com/wp-content/uploads/CHEROKEE-FILES-White-House-NSC-meeting-on-Kwangju-May-22-1980.pdf>〉
- NODIS Holbrooke. "Nobody wants another Iran." December 3, 1979.
 〈<http://timshorrock.com/wp-content/uploads/NODIS-Holbrooke-Nobody-wants-another-Iran-Dec.-3-1979.pdf>〉
- Shorrock, Tim. "The Cherokee Files: New Documents Reveal U.S. Policy Making During Kwangju." (1996) 〈http://timshorrock.com/?page_id=334〉
- Wallerstein, Immanuel. "The world system after 1945." Eurozine (2011).
 〈<http://www.eurozine.com/articles/2011-04-29-wallerstein-en.html>〉

The Response of the U.S Government to the South Korean State Violence during the Cold War

Park, Hongse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to political crises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In the case of the April 3 incident in 1948 and the May democratic movement in 1980, Washington did not oppose Seoul's violent suppression of protesters. By contrast, in the April 19 revolution, Washington not only criticized Seoul for its crackdown but also urged it to step dow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led Washington to approve Seoul's suppression of the April 3 incident and the May democratic movement. By contrast, Washington's critical response to the April 19 revolution resulted from the U.S.-Soviet peaceful coexistence since the later 1950s.

Key word: State violence, The Jeju April 3 incident, The April 19 revoluti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Cold War, The structural realism,

박홍서(Park, Hongseo)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연구교수 및 상하이 사회과학원 방문학자를 지내고 현재 강원대학교 시간강사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푸코가 중국적 세계를 바라볼 때: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북핵 위기 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 딜레마 연구' 등이 있다.